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 차>

-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공시 등
-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등록취소
-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등록취소
- 집합투자재산 운용현황 등의 보고 의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자	이름	민인영
	담당부서 (과)	자산운용과		직급	사무관
	국장	박정훈		연락처	02-2100-2662
	과장	김기한		이메일	asset1234@korea.kr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공시 등																		
	2.규제조문	자본시장법 제91조제4항, 별표1 제102호																		
	3.위임법령	해당사항 없음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18.3.9.~4.1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2015년 발표한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근거하여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함																		
	7.규제내용	운용사가 공모 펀드 운용인력의 운용성과, 보상 체계 등을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8. 피 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내용</th></tr><tr><td>피규제자</td><td>금융회사</td><td>공모 집합투자기구 운용 집합투자업자 (75개)</td><td>입법예고</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금융감독원 등</td><td>-</td><td>입법예고</td><td>-</td></tr></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금융회사	공모 집합투자기구 운용 집합투자업자 (75개)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등	-	입법예고	-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금융회사	공모 집합투자기구 운용 집합투자업자 (75개)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등	-	입법예고	-																
9.기대효과	○ 펀드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자 권익 보호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정성 분석)	○ (편익) 해외와 같이 펀드 운용인력의 운용성과, 보상 체계 등을 공시하여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비용) 현재 자율규제로 운영중인 사항을 법적규제로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비용 발생은 없음																		
기타	11. 일 물 설 정 여부	X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1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 ③ (생략)	제91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u>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및 보상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 및 주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는 기존에 자율규제의 형태로 운영이 되어왔으나,
 - 공시의 정확성·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내역을 금감원이 직접 확인하거나, 매월 공시 또는 자산운용보고서로 안내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 공시의 적시성이 저하되고, 운용사의 과도한 업무부담 및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현행 개정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진행 중

3. 기대 효과

- ☐ 현재 운영중인 펀드 운용인력에 대한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자 보호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규제목적)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인력 공시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강화
- ☐ (규제수단) 현재도 자율규제를 통해 공시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감안시 규제수단도 적절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X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미국의 경우도 '04년 SEC규정에서 펀드매니저 관련 내용을 공시

※ 미국 펀드매니저 공시항목

- ① 펀드매니저 인적사항, 직위, 재직기간, 업무경력(팀의 경우 5인까지)
- ② 펀드매니저 보상 지급 형태 : 고정급, 보너스, 복리후생 등(금액은 미공개)
- ③ 펀드매니저 보상 책정의 기준이 되는 성과 측정 방법
- ④ 펀드매니저 및 그 직계가족이 보유하는 해당 펀드 및 다른 펀드 내역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자율규제를 통해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준수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오히려 정보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규제 차등화 방안

- 모든 집합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이므로 이를 차등화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여건상 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 이에 투자자 규제 내실화 목표에 따라 펀드 매니저의 운용실적 등을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 ☐ 올바른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할 계획

3. 종합결론

- ☐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펀드 투자자보호라는 대원칙 달성
 - 기존 공시사항에 대한 정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회복 역할 수행 가능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등록취소																		
	2.규제조문	자본시장법 제253조제1항																		
	3.위임법령	해당사항 없음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18.3.9.~4.1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다른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결과('18.2.1), 집합투자기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 추진																		
	7.규제내용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 집합투자 기구로 등록한 경우 중대한 법 위반사항인 만큼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																		
	8. 피 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내용</th></tr><tr><td>피규제자</td><td>금융회사</td><td>공모 집합투자기구 운용 집합투자업자 (75개)</td><td>입법예고</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금융감독원 등</td><td>-</td><td>입법예고</td><td>-</td></tr></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금융회사	공모 집합투자기구 운용 집합투자업자 (75개)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등	-	입법예고	-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금융회사	공모 집합투자기구 운용 집합투자업자 (75개)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등	-	입법예고	-																
9.기대효과	○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모펀드 시장의 신뢰를 회복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정성 분석)	○ (편익) 부정등록된 집합투자기구를 의무적으로 등록취소하여 투자자 신뢰 확보 및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비용)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규제에서 의무적 취소사항을 추가 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기타	11. 일 물 설 정 여부	X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u>제3호</u> 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 ----- ----- ----- <u>제1호 및 제3호</u>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경우 의무 등록취소 사유로 개정하도록 권익위에서 권고 (부패영향평가, '18.2.1)
-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권익위 권고에 따라 재량이 없는 의무 등록취소 사유로 개정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현재 집합투자기구의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와 상대적 등록취소사유는 모두 자본시장법에 구체적으로 열거
- 투자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기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즉각적인 등록 취소 이외에 별도의 대안을 찾기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진행 중

3. 기대 효과

- ☐ 부정한 방법을 통해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펀드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규제목적) 펀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펀드 시장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써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확대
- ☐ (규제수단) 현재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나, 금융당국에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불과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X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현재 ‘국내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경우 이를 감독주체인 금융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과는 관련 없음
- ☐ 규제 차등화 방안
 - 공모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는 모든 집합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이므로 이를 차등화하여 규제할 근거가 없음

2. 규제 집행가능성

☐ 행정적·재정적 집행가능성

- 펀드의 등록 등의 절차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이므로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여건상 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권익위 권고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반영

2. 향후 평가계획

- ☐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이해당사자와 협의 등을 통해 미비점 보완 예정

3. 종합결론

- ☐ 해당 의무적 등록취소제도는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펀드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등록취소																		
	2.규제조문	자본시장법 제282조제1항																		
	3.위임법령	해당사항 없음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18.3.9.~4.1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다른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결과('18.2.1), 집합투자기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 추진																		
	7.규제내용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경우 중대한 법 위반사항인 만큼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 ○ 국내 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외국 집합투자기구도 해지 또는 해산시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 하도록 기존 시행령 규정 사항을 법률에 규정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내용</th></tr><tr><td>피규제자</td><td>금융회사</td><td>외국집합투자업자 중 국내 판매를 위 해 등록한 자 (약 1천여개 등록)</td><td>입법예고</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금융감독원 등</td><td>-</td><td>입법예고</td><td>-</td></tr></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금융회사	외국집합투자업자 중 국내 판매를 위 해 등록한 자 (약 1천여개 등록)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등	-	입법예고	-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금융회사	외국집합투자업자 중 국내 판매를 위 해 등록한 자 (약 1천여개 등록)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등	-	입법예고	-																
9.기대효과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경우 또는 해지·해산시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의무적으로 취소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나아가 펀드시장의 신뢰 회복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정성 분석)	○ (편익) 부정등록된 집합투자기구 및 해지·해산된 집합투자기구를 의무적으로 등록취소하여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비용)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규제에서 의무적 취소사항을 추가 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기타	11. 일몰 설정 여부	X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u>다만, 제1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한 경우</u>
3. ~ 7. (생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경우 의무 등록취소 사유로 개정하도록 권익위에서 권고 (부패영향평가, '18.2.1)
-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권익위 권고에 따라 재량이 없는 의무 등록취소 사유로 개정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현재 집합투자기구의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와 상대적 등록취소사유는 모두 자본시장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투자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기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즉각적인 등록 취소 이외에 별도의 대안을 찾기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진행 중

3. 기대 효과

- ☐ 부정한 방법을 통해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규제목적) 펀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펀드 시장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써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확대
- ☐ (규제수단) 현재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취소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X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현재 '국내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경우 이를 감독주체인 금융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과는 관련 없음

☐ 규제 차등화 방안

- 국내 판매를 위해서 등록된 모든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한 규제이므로 이를 차등화하여 규제할 근거가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재정적 집행가능성

- 펀드의 등록 등의 절차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이므로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여건상 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권익위 권고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반영

2. 향후 평가계획

- ☐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이해당사자와 협의 등을 통해 미비점 보완 예정

3. 종합결론

- ☐ 해당 의무적 등록취소제도는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펀드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집합투자재산 운용현황 등의 보고 의무																		
	2.규제조문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 제5항																		
	3.위임법령	해당사항 없음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18.3.9.~4.1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 설립·운용을 허용함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소관부처인 중기부에도 운용현황 등을 보고할 필요성이 있어 규제 도입																		
	7.규제내용	창업·벤처 PEF를 운용하는 창업투자회사는 운용현황 등을 금융위 및 중기부 장관 각각에 보고하도록 규정																		
	8. 피 규제 집단 및 이해 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내용</th></tr><tr><td>피규제자</td><td>창업투자회사</td><td>창업투자회사 (120개)</td><td>입법예고</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금융감독원 등</td><td>-</td><td>입법예고</td><td>-</td></tr></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회사 (120개)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등	-	입법예고	-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회사 (120개)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등	-	입법예고	-																
9.기대효과	○ 감독당국의 원활한 감독을 통해 투자자 보호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정성 분석)	○ (편익) 창업투자회사의 운용현황 등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기부에서 지속 관리·감독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강화 ○ (비용) 금융위 제출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중기부에도 제출하는 것으로 특별한 비용 발생 없음																		
기타	11. 일 몰 설 정 여부	X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9조의23(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제249조의23(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⑤ ----- ----- ----- ----- ----- ----- -----.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 PEF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으로,
 - 창업투자회사의 주무부처인 중기부에도 창업투자회사의 운용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서 금융위 및 중기부에 각각 보고하는 것 외에 별도 대안은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창업투자회사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진행 중

3. 기대 효과

- ☐ 중기부의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 강화 및 투자자 보호 제고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규제목적)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 운용현황을 주무부처인 중기부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감독 실효성 강화
- ☐ (규제수단) 여타 창업·벤처 PEF를 설립·운용하는 자들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을 중기부에도 보고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부담이 없는 만큼 규제수단도 적절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X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당사항 없음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융위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중기부에도 보고하는 것인 만큼 준수 가능
- ☐ 규제 차등화 방안
 - 모든 창업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이므로 이를 차등화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없음

2. 규제 집행가능성

☐ 행정적·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여건상 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 설립·운용이 허용됨에 따라 운용 현황 보고 의무가 추가

2. 향후 평가계획

- ☐ 정기적으로 운용현황을 보고받아 관리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

3. 종합결론

- ☐ 창업·벤처 PEF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창투사의 보고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불가피